

김대중 대통령 귀하

안녕하세요.

어려운 때 국정을 맡아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으시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군포 새교육 공동체 정책실장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 고교입시 평준화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성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교육개혁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고교 입시 정책은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새교육 공동체에서는 여론조사, 토론회, 공청회, 교육감 면담을 통하여 경기도 고교입시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경기도 교육감의 개혁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평준화 입시제도는 중학생의 입시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에서 무시험 전형은 교육개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교입시제도는 수원과 성남 구시가지만 평준화로 실시하고 나머지 전 지역은 비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이 진학희망 학생수보다 많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어 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즉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내신성적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수행평가라 하더라도 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반면, 고교입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평가과제를 부모가 해주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심지어 전문적으로 수행평가를 대신해 주는 학원마저 생겨나

는 파행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학생의 입시 부담의 증가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이고, 입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중학생을 둔 가구가 평준화 지역인 서울로 진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고교입시 비평준화 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회에서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에게 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의 교육 방법은 자연스럽게 주입식으로 이루어 졌고, 평가는 누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느냐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교육 목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어 관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직, 통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창의적 능력과 능동성이 학생에게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이 소질과 적성도 맞지 않는 모든 과목을 학교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반강제적으로 다해야 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는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계발될 수 없습니다. 작은 그릇에 억지로 많은 양의 지식을 담는 것보다 다소 양이 적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넓고 깊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통하여 함양된 자기 주도 학습태도 및 호기심, 창의성은 중학교에 들어와,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많은 과목별 과제와 시험에 짓눌려 모두 시들어 버리는 것이 고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의 교육적 폐해입니다.

셋째, 경기도 교육감의 고교 입시 평준화 반대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성적의 하향 평준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 학교 간 경쟁약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고교 입시 평준화를 반대하고 있으나 근거가 희박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는 고교입시 평준화 시행 2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성적의 하향 평준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평준화가 학생의 성적을 하향 평준화 시켰다

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98년 1월 김한길 의원과 국민회의 교육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평준화 지역인 수원과 비 평준화 지역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 중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성적과 고등학생의 수학능력시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준화 지역인 수원의 성적 향상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평준화 제도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교육감의 논리도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은 상위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학생은 점수에 맞추어 교사가 지정해주는 학교에 진학할 뿐입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교육환경이 다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4개 신도시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개교되어 교육환경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목표와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교육청 및 교사들이 인위적으로 서열화 시켜놓은 학교순위 밖에 없습니다.

평준화 제도가 학교간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고등학교가 이미 서열화 되어 있어 신입생을 입학시킬 때부터 학교간 격차가 생겨납니다. 서열이 높은 학교와 서열이 낮은 학교와는 애초부터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열이 상위인 학교의 성적이 높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개별학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간 서열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수원 지역과 같이 평준화 된 지역은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생의 성적 향상률이 더 높습니다.

넷째, 지역주민과 학생 80%이상이 고교입시 평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교입시 정책을 결정하는 경기도 교육청은 지방자치 단체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경기도 7개지역 < 안양 군포 (산본) 과천 의왕, 분당, 부천(중동), 고양(일산) > 시민단체가 여론 조사한 결과 80%이상의 학부모와 학생이 고교입시 평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안양 교육청을 통하여 98년 12월 관내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20,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0%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이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론 조사 실시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양 새교육 공동체, 군포 새교육 공동체, 분당 학부모 모임, 고양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공정한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해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

한 지역 주민의 의견 조사 및 공청회를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여론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투명한 행정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이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은 소수 특정 계층과 특수 이익 집단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평준화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제기를 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0%이상의 주민이 고교입시 평준화를 찬성하자 울산 광역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올해부터 평준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한 영재는 특별한 교육과정(과학고, 영상고, 디자인고, 만화고, 바둑고, 기타 특별한 재능을 육성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교육과정으로써 인문계 고등학교는 서열화 되는 것보다 평준화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입시를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꾸는 데는 공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시 10개월 이전에 학생에게 예고되어야 하고, 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하고, 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비평준화 제도로 입시를 치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서두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은 평준화 제도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7개 지역은 고교입시 평준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고교입시 평준화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계속되는 대화 거부와 정책 변경 불가 방침에 지역주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행동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향하여 물리적 행동을 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지역 주민과 학생 교사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9년 8월 21일 이 성 올림